

<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내용

◆ 우리 연구원에서는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후원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인구학회 · 한국조사연구학회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 ·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순서

-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인기 사망률의 차이: 강영호
- 한국인의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성진
- 민간보험 가입에서의 선택: 김성옥
- 한국의 고용불안 실태에 관한 연구: 남재량 · 최효미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인기 사망률의 차이

담 당 자	강 영 호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화	02-3010-4290
매 수	3 매

I.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사망률에 차이가 있었다

- 『한국노동패널』 1차 조사(1998년도)의 50세 이상 남자 1,574명을 5년 동안 사망 여부를 추적하여, 아동기와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망 위험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 본인의 학력수준, 아버지의 직업계층, 15세 이후 첫 번째 직업의 직업계층, 출생 지역, 14세 당시 거주 지역이었고,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는 현 직업계층, 가구소득, 경제적 어려움 여부, 현 거주 지역이었음.
- 연령을 보정한 후, 아동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사망위험의 차이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고졸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무학일 경우의 사망 위험은 2.74배(95% 신뢰구간 : 1.01-7.42) 높았음. 본인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상일 경우에 비하여 무학자의 사망위험은 1.87배(95% 신뢰구간 : 1.20-2.92) 높았음. 15세 이후 첫 번째 직업계층이 비육체노동자인 경우에 비하여 육체노동자인 경우의 사망위험은 1.59배(95% 신뢰구간 : 1.11-2.29) 높았음. 또한 14세 당시의 거주지역이 서울 이외 지역인 경우의 사망위험은 2.75배 높은 양상이었음(95% 신뢰구간 : 1.22-6.23).
-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사망위험의 차이도 있었는데, 현 직업계층이 비육체노동자에 비하여 육체노동자의 사망위험은 1.42배(95% 신뢰구간 : 1.00-2.02)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의 사망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1.51배(95% 신뢰구간 : 1.08-2.10) 높았음. 현 거주지역이 중소도시/군지역의 사망률은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1.60배(95% 신뢰구간 : 1.07-2.39) 높았음.

II. 성인기에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더라도,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나빠면 사망확률도 높아진다

○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사망에 미치는 기전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음.

①

아동기 사회경제적 조건 ---> 성인기 사회경제적 조건 ---> 성인기 사망

②

- 첫째(①),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성인기 사망에 영향을 주고 있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망률 차이는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보정하면, 대체로 낮아지는 양상이었음.
- 둘째(②),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독립적으로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성인기 사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동기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망률 차이는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보정한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가 동일하더라도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나빴다면 사망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함. 14세 당시 거주 지역 지표는 네 가지의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본인의 직업계층, 월 가구 소득,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현 주거지역)를 개별적으로 보정하였을 때와 직업계층과 월 가구소득을 동시에 보정하였을 때 사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음. 성인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개별적으로 보정하였을 때, 본인의 교육수준 또한 사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음. 15세 이후 첫 번째 직업계층 또한 월 가구소득, 경제적 어려움, 현 거주지역 지표를 보정한 후에도 사망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졌음.

III.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

- 이 연구 결과는 성인기의 사망에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함.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시기(또는 특정 연령층)만이 아닌 생애에 걸친 사회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시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한국인의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답 당 자	강 성 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화	011-291-5162
매 수	4 매

I. 거시적 경제환경의 변화와 개인들의 행복감 (생활만족도)의 관계

- 과거의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에 의해 행복추구의 과정이나 결정변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져 왔으나 개념의 주관성 때문에 실증적 분석의 어려움이 있음.
- 최근의 개별 구성원의 행복감 (생활만족도)의 자료가 Survey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경제학자들의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통적인 경제 이론들은 인간 개인들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관측 가능한 선택에 의해 나타나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의 효용은 현시된 행위에 의해 추정되는 재화와 용역에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이들 행위에 의한 선택을 설명하려고 함.
- 본 연구는 한국의 외환위기 전후를 통해 한국국민의 거시적 경제지표의 변화와 개인의 행복감 (생활만족도)의 관계와 그 결정요인을 가구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음.
 - 지역별 행복감의 변화를 외환전후기를 비교함.
 - 소득 (소비)의 행복감에 주는 영향을 보고, 그 외의 다른 변수 즉,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을 고려함.
 -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1958년 이후 괄목한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실증분석은 전통적 경제학이 추구하는 효용함수의 가정에 의문을 던져줌.
 - 일반적으로 국가별 분석결과를 보면 약 10,000달러 까지는 소득과 정의 관계를 가지지만 그 이후의 상관관계는 그 전보다 약하게 나타나 소득이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Ⅱ. 한국민의 행복감 (생활만족도)의 결정요인

-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한국의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패널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함.
- 한국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1998년 이후 여러 거시적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

<표 1: 생활에 대한 행복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가족의 수입	2.501	2.579	2.518	2.554	2.649	2.612	2.569
여가활동	2.784	2.778	2.769	2.789	2.871	2.857	2.808
주거환경	3.079	3.172	3.156	3.152	3.214	3.250	3.170
가족관계	2.722	3.713	3.614	3.573	3.607	3.628	3.643
친인척관계	n.a.	n.a.	3.426	3.407	3.423	3.429	3.421
사회적친분관계	n.a.	2.940	3.392	3.375	3.382	3.401	3.298
전반적 활동	2.887	2.946	3.054	3.079	3.117	3.182	3.044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03

- 지역별로 보면 1998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가 큰 지역은 경남, 울산, 충북과 부산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만족감을 보여주던 지역은 경북, 서울, 대구, 그리고 충남이었다. 반면에 2003년을 보면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는 지역은 인천이 가장 높은 만족감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경남, 전남 그리고 대구 순이었다. 1998년과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 만족감의 변화한 정도를 보면 199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지역이 울산과 충북이다. 반면에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이었고 그 다음에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 순이었다.

<표 2> 지역별 전반적 행복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개인수
서울(1)	2.726	2.908	2.982	3.014	3.056	3.107	2.963	9,700
부산(2)	3.125	3.095	2.991	3.042	3.075	3.177	3.084	4,816
대구(3)	2.776	2.917	3.048	3.064	3.071	3.214	3.015	2,110
대전(4)	2.795	2.788	3.128	3.345	3.156	3.179	3.066	1,492
인천(5)	2.819	2.947	3.024	3.161	3.070	3.305	3.055	2,500
광주(6)	2.946	2.936	3.049	2.971	3.114	3.121	3.024	1,233
울산(7)	3.160	2.914	2.932	3.017	3.078	3.129	3.038	1,396
경기(8)	2.895	2.980	3.204	3.102	3.171	3.209	3.097	6,941
강원(9)	2.826	2.794	2.910	2.931	3.036	3.106	2.935	816
충북(10)	3.143	2.994	3.187	3.331	3.129	3.091	3.147	996
충남(11)	2.786	2.765	3.039	3.085	3.084	3.152	2.985	1,402
전북(12)	2.800	2.889	3.126	3.228	3.316	3.171	3.088	1,735
전남(13)	2.929	2.779	3.005	3.136	3.172	3.280	3.050	1,285
경북(14)	2.675	2.761	2.899	2.856	3.068	3.199	2.909	2,310
경남(15)	3.206	3.216	3.187	3.179	3.237	3.292	3.220	3,181

자료: 한국노동패널, 1998-2003.

- 개인들의 느끼는 행복감의 결정원인을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1인당 소득 보다는 소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자신의 소득에 비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소득이 클수록 본인의 행복감은 감소함을 보여 줌. 즉, 자신의 소득(소비)이외의 주변 타인의 소득 및 소비도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상대적 소득가설을 지지함. 예를 들면, 사촌이 받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의 의미를 증명함.
- 그 외에 사회 인구학적 요소 (또는 미래소득의 결정요인)들을 보면 연령의 경우 음의 선형관계라기 보다는 비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여성일수록 행복감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 도시에 사는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덜 느끼고 있고 15세 이하의 가구원 수는 행복감과 양의 관계를 보이거나 60세 이상의 가구원 수는 음의 관계를 보여 줌.
-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 다른 국가들의 연구결과와 다른 점임.

- 다른 연구에서 고려되어지지 않은 변수로 가구주는 다른 구성원에 비해 행복감의 정도가 적게 나타남. 아마 한국국민의 고유한 가족구성의 특성에서 이런 결과가 야기된다고 봄.

민간보험 가입에서 선택

담 당 자	김 성 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화	02-2071-2521
매 수	3 매

I. 민간보험 가입과 관련한 실증 연구미비

-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또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건강보험 활성화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이러한 논의는 민간보험도입형태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 주요 초점이 이루어져 왔으나, 민간보험 가입자의 특성 및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음. 특히 민간보험가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selection)의 형태와 발생양상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민간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가입자보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선택(selection)이란 질병확률이 높은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감춘 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 및 질병확률이 낮은 다른 사람에게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또 보험자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질병확률이 높은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선택적으로 제외시키기 위하여 행정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됨.
- 선택 문제로 인해 민간보험은 의료영역의 사회보장 원리를 악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으며, 민간보험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공보험의 의료형평성과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의료수요증가로 인한 공보험 급여지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 칠레의 경우 피노체(Pinochet) 정권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료재정을 축소하기 위해 경쟁형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건강하고 부유한 근로자가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하게 되어 건강하지 못한 저소득자가 가입하게 되는 공적의료보험보다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이중적 보험제도가 형성되었음. 따라서 칠레 피노체 정권의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경쟁시키려는 시도는 저소득자가 주로 가입하는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을 압박하였고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최병호, 2004).

II. 민간보험가입자의 특성과 가입선택(selection)

- 민간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표 1)에서 연령이 젊은 층이, 여성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19세 이하 부양자수가 많은 사람이, 일부 건강유지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민간보험 가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지병이 있는 사람이 민간보험 가입율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한적형태이긴 하나 현재 우리나라 민간보험 가입에서 보험자의 선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함.
- 민간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의료이용 분석결과에서 전체적인 이용자료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건강검진율이 미가입자에 비해 높아 민간보험가입자가 예방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의료비 지출 분석결과에서 민간보험 가입자에 비해 미가입자가 의료이용빈도는 낮으나 의료이용시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민간보험 가입을 결과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Wald Chi-Square	Pr > ChiSq
절편	-1.6541	0.2111	61.3714	<.0001
연령	-0.0233	0.00244	91.4856	<.0001
성(여자 0, 남자 1)	-0.2567	0.0499	26.4362	<.0001
주관적 건강상태	0.0389	0.0317	1.5101	0.2191
고혈압	-0.5015	0.1503	11.1312	0.0008
당뇨	-0.3098	0.1764	3.0853	0.0790
암	-0.5551	0.3002	3.4190	0.0644
관절염	0.0347	0.1465	0.0561	0.8127
천식	-1.0523	0.4970	4.4840	0.0342
장해/장애	-0.3468	0.1494	5.3835	0.0203
술/담배 절제	-0.0991	0.0926	1.1450	0.2846
운동 실시	0.3705	0.0575	41.4551	<.0001
식사 조절	0.0473	0.0637	0.5525	0.4573
보약/영양제 복용	0.3519	0.1073	10.7538	0.0010
목욕/사우나	0.1610	0.0845	3.6315	0.0567
기타	0.1452	0.1861	0.6086	0.4353
정기건강검진	0.6374	0.0599	113.3313	<.0001
결혼(기혼,유배우자=1,그외0)	1.1354	0.0742	234.4813	<.0001
소득	0.000606	0.000048	160.4452	<.0001
피고용인	0.7313	0.0553	174.9354	<.0001
자영업	0.7805	0.0661	139.5440	<.0001
교육수준	0.0476	0.00756	39.5690	<.0001
가족수	-0.0582	0.0189	9.4941	0.0021
가족에게 도움여부	-0.0269	0.1628	0.0272	0.8690
19세이하 부양가족수	0.7398	0.0590	157.0918	<.0001
의사-인구비	-0.00030	0.000904	0.1135	0.7362
실업률(2001년 7월기준)	-0.0722	0.0366	3.8814	0.0488

자료 : 한국노동패널 2001년 자료

한국의 고용불안 실태에 관한 연구

담 당 자	남 재 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 효 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전 화	011-390-3247
매 수	4 매

I.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 성장률과 실업률 등으로 본 최근 한국 경제의 성과는, 외환위기 발생 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리 나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음. 예: 청년실업, 비정규근로, 일자리 없는 성장, 고용불안, 양극화 등.
 - 본 연구는 특히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고용불안에 대해 분석함.
- 본 연구는 (1)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불안을 정의하고, (2) 정의에 입각하여 고용불안의 실태를 측정하며, (3) 고용불안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II. 고용불안의 정의와 실태

- 고용불안의 정의
 - 근로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일차적으로 실직의 두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며 (재)취업의 어려움도 고려하여야 함.
 -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고용불안’의 증대를 ‘실직 가능성’의 증가 및 ‘(재)취업 가능성’의 하락으로 정의함.

○ 주요 노동시장 변수와 고용불안

- 실직 가능성과 (재)취업 가능성으로 정의한 고용불안은 대표적인 노동시장 변수인 실업률, 비정규직 종사자 비율 등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임.
- 외환위기 발생 전의 실업률(2%)에 비해 2000년 이후의 실업률(3%)이 높아진 것은 분명함.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 비중은 199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의 52%를 고비로 이후 하락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시장 주요 변수들만으로 고용불안을 평가하기 어려움.

○ 유량변수를 통한 고용불안의 측정

- 고용불안을 구성하는 두 개념인 실직 가능성과 (재)취업 가능성은 노동력 상태의 동태적 변화를 의미함.
- 따라서 고용불안을 실업률을 비롯한 저장변수(stock variable)들로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력 상태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하는 유량변수(flow variable)들로 측정하는 것이 좋음.
- 패널자료를 사용하면 근로자들의 노동력 상태들 간 동태적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음.

○ 한국의 고용불안 실태

-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노동력 상태들 간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실직 가능성이 높아졌음. 1990년대 중반에는 취업자 100명 가운데 월평균 2.6명이 실직 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3.5명으로 크게 높아졌음.
- (재)취업 가능성은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다소 높아졌음.
- 고용불안을 구성하는 실직확률과 (재)취업확률의 비중과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용불안의 정도는 최근 들어 상당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불안

- 임금근로자의 실직 가능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의 실직 가능성은 약간 상승하는 데에 그쳤음.
-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 종사자의 실직확률은 오히려 하락한 반면 일용직의 실직확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재)취업확률로 보면 상용직과 임시직, 특히 상용직으로 (재)취업가능성은 크게 하락한 반면 일용직으로 (재)취업확률은 급증하였음.
- 결국 일용직 종사자의 실직확률 상승과 상용직으로 재취업 가능성 급락 및 일용직으로 재취업 가능성 급증이 고용불안의 핵심임.

Ⅲ. 고용불안의 원인

○ 고용의 창출·소멸과 고용불안

- 고용불안의 증대는 고용의 창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 아님. 고용 창출은 증가하였음.
- 고용불안이 높아진 것은 고용이 많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창출되는 고용도 일용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노동력의 여성화 현상 등도 고용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고용불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할 수 있음.

Ⅳ. 고용불안과 정책과제

○ 고용불안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 고용불안은 외환위기로 인해 증대되었다기 보다는 이미 외환위기 발생 전부터 진행되어 온 구조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문제임.
- 따라서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

○ 노동시장의 가격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

- 한국 노동시장은 가격보다는 수량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수량조정 과정에서 초래되는 문제인 고용불안의 문제를 노동시장의 가격기능 제고, 즉 임금유연성 제고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임금유연성 제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공공고용안정서비스를 확충하여 노동시장에서 정보 흐름의 원활화를 기하는 것이 한 가지 대안일 수 있음.